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4952호 2022년 6월 2일 목요일

[경제종합]
호암상 챙긴
이재용 부회장
경영혁신 도모
05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685.9 (+16.24)
코스닥 893.36 (+6.92)
금리(국고채 3년) 3.027 (+0.085)
환율(원·달러) 1237.2 (-1.40) 〈5.31〉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차려진 선거 캠프에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며 캠프 관계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1 지방선거 투표가 끝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사무소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與 '압승'… '안정' 택한 민심, 尹 정권 힘 실어줬다

2022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최종 투표율 50% 겨우 넘어
지난 지선 대비 10%p 낮아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與 우세

앞으로 4년간 우리 동네 현안을 책임질 지역 일꾼 4125명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50.9%로 잠정 집계됐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이후 최저치다.

〈관련기사 2~4면〉

제8회 지방선거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전국 1만44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지난 5월 27~28일 양일간 치러진 사전투표가 20.62%를 기록하며 본투표도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50%를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으며, 특히 4년 전 제7회 지방선거 60.2%에 비해서도 10%p 가까이 차이가 났다.

제8회 지방선거 투표 종료 후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 10곳 우세, 더불어민주당 4곳 우세, 경합 3곳으로 발표되자 양 당의 분위기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박지현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패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K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로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어진 KBS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10~13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승리에 이어서 지방행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전국 총 후보자는 7616명으로 평균 경쟁률 1.8 대 1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지사)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총 4125명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인천 계양을, 대구 수성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전국 7곳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졌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가 주목되는 점은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의 승부를 보였던 3·9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84일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치르는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경기 성남 분당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풀뿌리 선거에서 대선 연장전으로, '국정 안정론' 대 '정부 견제론'이라는 프레임도 생겼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얼마나 승리를 차지하느냐가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사인 만큼 양 당은 저마다 필승 의지를 피력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167석을 차지한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에서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텃밭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등 최소 10곳 이상을 승리해 국정 동력에 대한 민심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1년 전인 4·27 재보궐선거부터, 지난 3월 대선에서 0.73%p로 패해 정권교체를 허용한 만큼 연패를 끊고 국회 의석수를 활용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민심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수도권 등에서 최대 6곳 이상의 승리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가 이뤄진 가운데 무투표 당선도 직전 지방선거 대비 약 6배 폭증해 지방선거 이래 역대 최고 숫자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공개한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 321개 지역구에서 508명으로 전체 지방선거 선출 인원의 12.3%에 달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대형마트 족쇄 풀릴까… 새 정부, 유통규제 완화 주목

尹, 후보시절 마트 규제완화 언급
온라인 주문 등 이커머스 확장에
대형마트 통한 집객효과 큰 영향

새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동안 유통업계를 꽉 조였던 각종 규제 존폐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안은 2011년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조금씩 강화됐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 소비지형에서 일부 규제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게 되면서 완화가 필요해졌다. 또 마지막 개정 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통법 외 타 법률 개정이나 신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서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손 볼 것 역시 많아졌다.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며 '윤석열호'가 본격 돛을 펼친 1일 현재 유통업계의 각종 규제 속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반 소비자와 대면하며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중 하나다. 시행 만 25년을 맞은 유통법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제정됐다. 2010년 개정안에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을 담은 내용이 들어간 후 거듭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통법은 계속 논쟁 주제로 떠올랐다.

유통법 속 쟁점이 되는 주요 규제들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규제도 있지만 기업 간 공정성에 관한 내용도 있다.

◆ 대기업도, 소상공인도 우는 '낡은 규제'

구시대 규제란 비판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대형마트 운영과 관련한 규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에서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 완화를 언급한 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 관련 규제는 2010년 처음 3000㎡ 점포의 전통시장 반경 1㎞ 내 운영을 금지하는 안이 담긴 후 몇 년에 걸쳐 규제가 강해졌다. 현재 대형마트는 출점제한 외에도 월 2회 의무 휴업, 새벽시간 영업제한 등 규제에 묶여있다.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등 e커머스 영향력이 확대되자 대형마트를 통한 집객효과에 인근 소상공인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폐점한 대형마트 반경 3㎞ 이내 중소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음식점의 매출이 도리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버스터비 J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靑출신 민주 의원들, 경찰서장 만나 "평산마을 집회 금지하라" /사진 뉴시스

▲ 김기현, 양산시위에 "문빠가 朴·李에 저지른 짓에 비견 못 돼"

▲ 정호영 이어 김승희 마저… 투기·재테크·막말 '연일 의혹'

▲ 이재명-윤형선 모두 SNS서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

▲ 민주, 낮은 투표율에 "포기 말고 '1꾼' 뽑아달라" 호소 /사진 뉴시스

▲ 北, 바이든 '대만 군사 개입' 발언에 "파렴치한 위협 공갈"